

2024 KDI Conference

기업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다: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해법

김민호

KDI 연구위원

2024. 12. 11.

Table of Contents

01 기업 성장 역동성 하락

02 기업 지원정책 현황

03 지원정책 혁신방안

1. 기업 지원정책 개편: 민간 주도
 2. 기업 지원정책 개편: 네트워크 확장
 3. 정책금융 개선방안
 4. 디지털·AI 전환 대응: 전 산업의 디지털화
 5. 데이터기반 성과중심 기업 지원정책 개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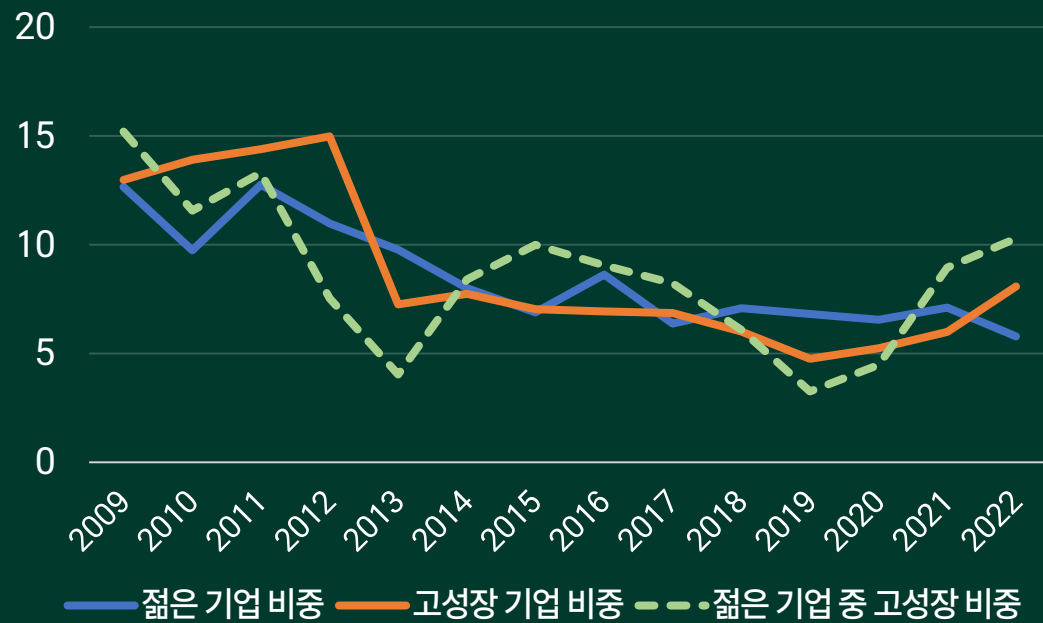
기업 성장 역동성 하락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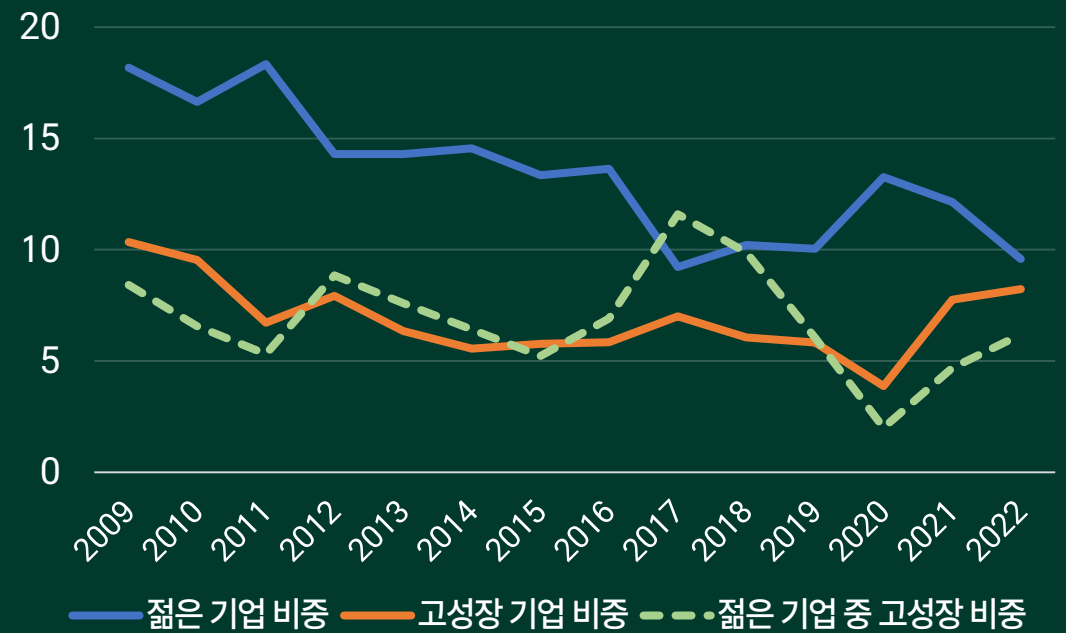
1. 기업 성장 역동성 하락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유입과 성장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 하지만, 지난 15년간 고성장 기업과 젊은 기업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음.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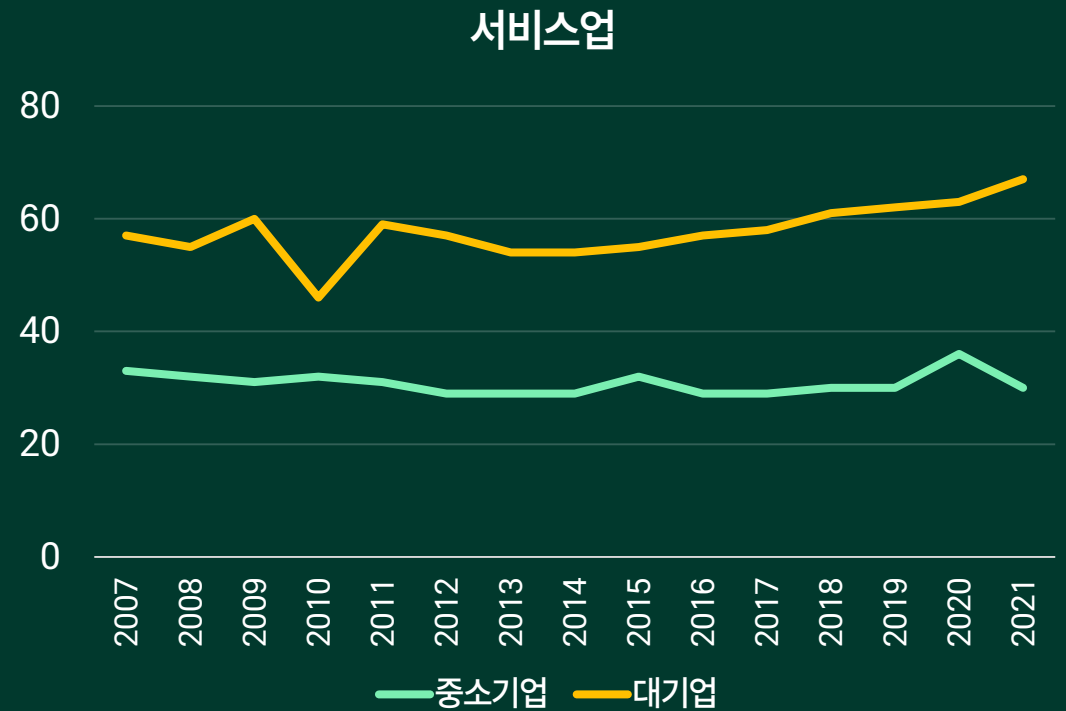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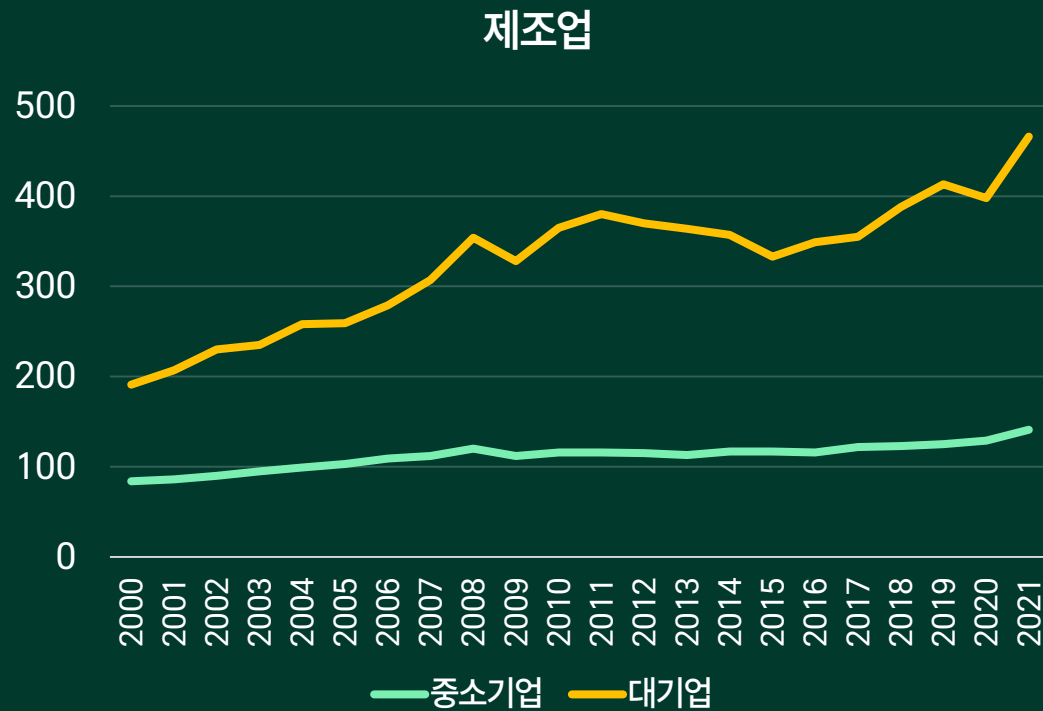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2006~2022) 이용 저자 계산.

2. 기업 생산성 정체

제조업 대기업을 제외한 부문에서 생산성이 정체하였으며, 대-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격차가 증가



주: 노동생산성은 종사자 수 1인당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단위는 백만원임.

자료: 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DB」(2000~2021)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기업 지원정책 현황

02

기업 활동 지원 규모는 큰 규모(34.5조)에 해당하나, 1,761개 사업으로 분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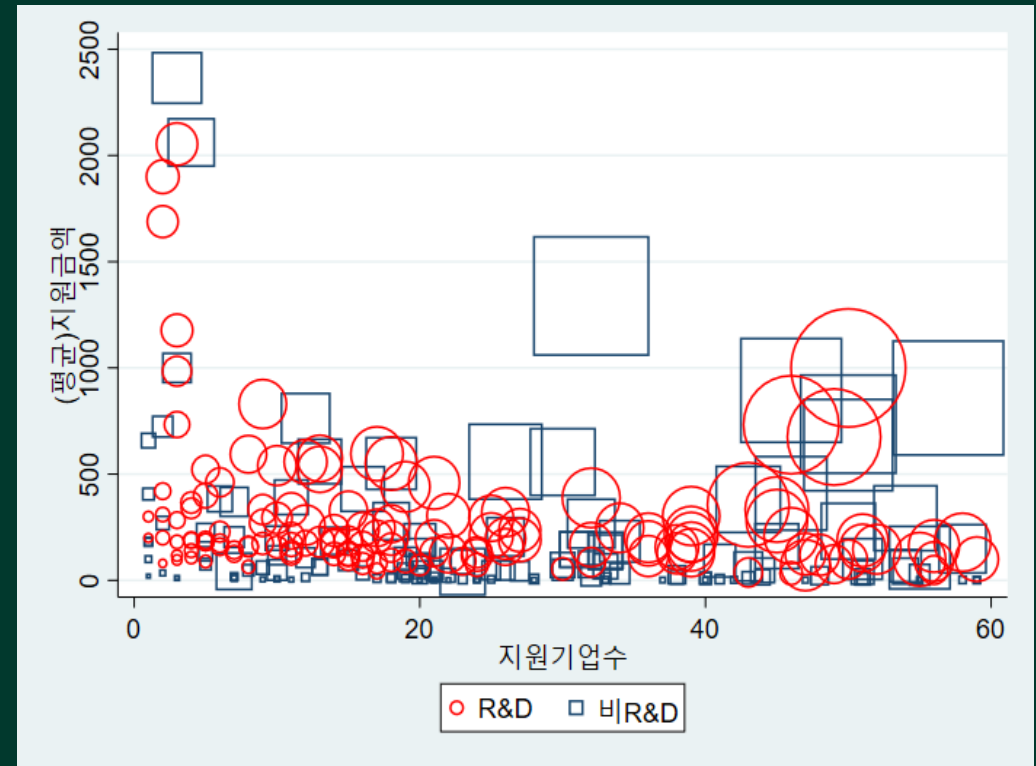
- 소수의 기업을 선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을 가능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2024 예산 (사업수)	34.5 조원 (1,761개)	31.9 조원 (470개)	2.6 조원 (1,291개)
2023 예산 (사업수)	35 조원 (1,646개)	32.5 조원 (530개)	2.5조 (1,116개)
2022 예산 (사업수)	35.4 조원 (1,597개)	32.2 조원 (336개)	3.2 조원 (1,256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

지원사업별 지원기업 수와 평균 지원금액



주: 지원기업 수가 60개 이하인 사업만 나타냄. 버블 크기는 사업별 총지원금액에 비례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SIMS DB 2022년 관리사업 현황관리」.

2. 지원정책 문제

현 지원정책은 1) 백화점식 과도한 분절화, 2) 특정 수단 한정, 3) 금전적 지원에 편중된 문제가 있음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명 Q C

분야(1311)

금융(248)

기술(249)

인력(90)

수출(157)

내수(123)

창업(41)

경영(394)

기타(9)

지역(163)

서울(5)

부산(10)

대구(7)

인천(12)

광주(9)

대전(3)

울산(14)

세종(5)

경기(28)

강원(1)

충북(7)

충남(4)

전북(12)

전남(10)

경북(19)

경남(14)

제주(3)

전체
중앙부처
지자체
지난공고보기
📄
등록일순
마감일순

번호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신청기간	소관부처·지자체	사업수행기관	등록일	조회수
249	기술	2024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 2단계(R&D지원) 선정 공고	2024-11-22 ~ 2024-12-23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11-22	382
248	기술	2025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2024-11-21 ~ 2025-01-06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4-11-22	290

자료: 기업마당 홈페이지.

우리나라 기업 지원정책은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가?



자료: OpenAI DALL·E 를 통해 생성 후 저자 수정.



지원정책 혁신방안

1. 기업 지원정책 개편: 민간 주도
2. 기업 지원정책 개편: 네트워크 확장
3. 정책금융 개선방안
4. 디지털·AI 전환 대응: 전 산업의 디지털화
5. 데이터기반 성과중심 기업 지원정책 개편

03

정부 주도, 단순 보조금 지원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비스포크(Bespoke) 수행모델로 전환

- 지원 방식 전환으로 성장에 의지가 높은 기업이 지원하도록 유인 구조를 제공
 - 주요 기업을 성장시킨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정해진 기간동안 1:1 맞춤형 자문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기업 성장에 대한 주요 장벽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실행 계획을 개발 및 수행
- 정책 담당자와 지원 기관이 일하는 방식이 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편 및 전문화될 필요
 - 기업 선별, 사업 운영을 민간이 주도 (예: EIC Scaling Club)
 - 네트워크 민관 협력 조직 구성 (엑셀러레이터, 투자사, 컨설팅, 전문서비스, 대학교 등)
 -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IP,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자문을 관련 전문가가 제공

바우처 위주 사업에서 전방위 네트워크를 통한 파트너 매칭 지원으로 사업 기회 확장

■ 우리나라 수출지원은 수출이용권(바우처) 사업 위주

- 바우처 사업은 메뉴판에서 찾아 신청할 수 있으나, 단일화된 창구로 기업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17개 지원기관 이외에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13개 국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해외전시포탈, 수출연합체 등을 운영

■ 네트워크 플랫폼(Scaleup Army)을 구축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는 파트너를 찾아주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기업,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상공회의소, 협회 등이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 단일 창구를 통해 스케일업 기업들에게 수출입, 공동 R&D,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한 파트너십 기회 제공
-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국내외 기관 및 민간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매칭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만이 아닌 해외 기업의 국내 파트너 연결도 돕는 양방향 네트워크로 구축

- 해외에서 국내 제조업체, 제품 개발 업체, 서비스 기업을 찾는 경우, 국내 기업을 연결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스마트산단 공유플랫폼, 제조알자 등 제조기업 리스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디자인, 제조, 서비스, 연구협력 등 다양한 해외 수요에 국내 기업 혹은 연구기관을 매칭

현 정책금융은 1) 과도한 규모, 2) 생산성 저해 가능성, 3)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의 문제점을 노정

1 정책금융 체계의 선진화

- A 정책금융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 기재부 컨트롤 타워, 실무협의 구성
- B 정책금융 지원 체계의 고도화: 통합 플랫폼으로 일원화
- C 정책금융의 종합적 성과평가 체계 구축

2 정책금융 업무 및 역할 개선

- A 정책금융의 기업대출 관리방안: 민관혼합 대출방식 고려
- B 정책금융의 신용보증 관리방안: 기업별 신용보증 한도비율 제한
- C 정책금융의 모험자본시장 지원 강화방안: CVC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 D 정책금융의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 구조조정제도 개선 및 역할 명확화

3 정책금융 지원대상의 전환

- A 혁신중소기업 지원 중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B 정책금융의 민간금융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특정 기업의 기술 도입 지원, 제조업 위주 디지털 전환에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확장

- 산업별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산업별 특성과 요구에 따른 전략을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제조업 12개 업종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가 출범
 -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전문서비스, 헬스케어, 소매업, 물류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산·학·연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업의 정책 수요가 정책 설계에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정책의 연계로 산업 생태계를 지원
-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혁신
 - 특정 기술 지원이 아닌 디지털 전환 과정을 돕는 지원으로 전환
 - 지역 및 산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보완적인 조직운영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 전환 정책이 데이터 관리, 솔루션 공급, IoT, 로봇 등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마중물 역할

지원 이후 사후 평가 방식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성 높은 지원정책, 접근하기 쉬운 지원 체계 마련

1 정부 지원내역과 성과 공개

- A 기업 지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예: usaspending.gov)
- B 전체 정책 금융 및 지원 통합관리를 통한 지원 한도제 효과적 운영
- C 지원 사업의 간접비 비율(실제 기업 지원 내역/예산) 공개
- D 지원사업 효율화를 위한 ‘원-인, 모어-아웃(One-in, More-out)’ 제도 시행

2 데이터기반 정책 전환

- A 정책 지원 대상 선별에 AI 활용: 정책 효과성이 높은 대상을 분별하여 지원
- B 정책 시행 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효과성 제고
- C 정책금융의 모험자본시장 지원 강화방안: CVC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 D 정책금융의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 구조조정제도 개선 및 역할 명확화

3 수요자(기업) 중심 One-stop shop 체계 구축

- A 수요자(기업) 입장에서 우선 민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 및 연결하고 AI를 활용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 추천 (통합 공고와 다른 방식)
- B 정책금융 지원 시 우선 민간 금융사가 심사 및 대출(보증) 시행, 참여 민간 금융사가 없는 경우 적합한 정책금융 프로그램 추천 및 심사 (예: 미국 SBA 대출)